

“외국인력 축소 노인·여성 활용을”

직업훈련·소개업무 민간참여 검토...시간제노동 활성화

인력부문 간담회

직업훈련과 소개 등 노동시장 공급과정에 민간기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정부 안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. 또 외국인력 수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과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.

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짜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18일 오후 최종찬 경제기획국장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원과 민간연구소 연구원,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인력부문 간담회’를 열었다.

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이 간담회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과 소개 등의 업무에 민간기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제기돼 집중토론

이 이루어졌다고 19일 밝혔다. 기업에 구인난과 취업희망자의 취업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직업훈련과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들도 이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.

토론회에서는 또 참석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력 수입은 한계기업 퇴출과 유류인력 활용을 저해하므로 한시적 활용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들은 외국인력 수입보다는 노인·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, 노인인력 활용방안으로 △정년 연장 △고령자 고용촉진 의무제 도입 △노인적성의 직종 개발 △노인능력은행 내실화 △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.

여성인력 활용방안으로는 기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

위해 타아제도를 확충하고, 여성이 취업하면 육아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등 조세지원을 해주는 안이 제시됐다. 특히 부부의 제조업체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여성의 제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.

간담회에서 민간연구소들은 “기업이 너무 많은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노동법의 규제로 고용조정이 어렵다”며 대책을 촉구했는데, 시간제노동과 파견근무제 활성화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.

민간연구소 연구원들은 “시간제 노동자 활용 수준이 일본이 20%인 데 견주어 우리나라는 5%에 불과하다”며 “이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”이라고 주장했다. 그러나 보호기준을 완화할 경우 기업주들이

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됐다.

간담회에서는 또 대학에 정원파학과 통폐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, 전문대학은 실수요에 맞게 교과과정을 개선해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. 기술자격제도는 현장활용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기됐다.

간담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. △최종찬(경제기획원) △정인수(노동연구원) △이주호(한국개발연구원) △이가옥(보건사회연구원) △김태홍(여성개발원) △윤건영(연세대) △남성일(서강대) △김재원(한양대) △조희일(서울여대) △이대창(기아연구소) △김영배(한국경영자총협회) △최동규(중소기업연구원) 이복수 기자